



6·15 남북공동선언과 평화로 가는 길

22년 전 그날의 선언이 갖는 의미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석 달 넘게 진행 중이다. 이번 전쟁으로 군인의 희생은 물론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 소중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난민이 되어 표류하거나 민간인 학살, 고문, 성폭행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한 전쟁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6월 2일 가디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룩셈부르크 의회 영상 연설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점령당한 면적이 12만 5,000km²에 달한다. 이는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을 합친 것보다 큰 면적”이라며 “30만km²에 달하는 국토는 지뢰와 불발탄으로 오염됐다”고 강조했다. 또 침공 이후 군인과 민간인 등 우크라이나인 1만 4,00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약 1,200만 명의 실형민이 발생했고, 이 중 여성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500만 명이 해외로 떠났다고도 했다.

이러한 전쟁은 전쟁 당사국만의 고통은 아니다. 원유와 곡식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세계인의 삶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더욱이 우리는 72년 전,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겪었기에 전쟁의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온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간의 밀고 밀리는 공방 속에 1953년 7월 27일, 정전 합의에 따라 전쟁이 멈췄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한국전쟁으로 24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그중 반이 넘는 12만 명이 넘는 민간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다 돼가지만, 그 전쟁의 충격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이어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에 이은 같은 해 6월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6·15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하며 평화

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의한 2차에 걸친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무장 등 여러 긴장 관계가 있었고, 아직도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6·15남북 공동선언

2000년 6월 15일은 남과 북의 정상이 한반도 분단 55년 만에 만나 한반도를 갈등에서 화해로,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된 역사적인 날이다. 이는 남북 최초의 정상회담으로 상호이해를 증진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중대한 의의가 있는 5개 항을 합의했다. 그 내용은 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남과 북의 통일방안에 대해 공통성을 인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등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고, 이러한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당국 간 빠른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7.4 남북공동성명’ 등이 일회성에 그쳤으나 이 선언으로 지속적인 화해 협력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다.

통일의 모범 독일과 한반도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면서 패전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연합국에 의해 영토가 동과 서로 강제 분할되어 연합국의 합의가 없으면 통일은 불가능했다. 지정학적으로 독일은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유럽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통일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통일 이전의 동·서독 관계는 1951년 베를린 협약을 통해 동·서독 교류의 단초를 열었고,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과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로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평화적 공존 관계를 지속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바람이 동유럽에 일자 동독도 그 영향으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했고, 1990년 3월 18일 동독 자유총선거에 의한 동독기민당의 집권, 1990년 8월 23일 동독인민회의의 ‘서독 편입안’ 압도적 찬성 등으로 독일통일이 이루어졌다.

독일통일의 과정은 ‘선거조약’ 등과 같은 조약과 협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유럽통합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독일통일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분단국이 평화적이고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주체인 당사자는 물론 주변환경과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중의 패권전쟁과 한반도

우리는 ‘미·중의 패권 전쟁’을 현실에서 생생하게 보고 있다. 21세기의 패권경쟁은 전쟁으로 인한 공멸보다는 규범과 질서를 통한 지배권 대결이라고 하지만 단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관세부과로 시작된 미·중의 무역 마찰은 첨단정보통신기술 전쟁으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환율, 국방 및 안보 부문으로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패권 확대는 남중국해 군사적 긴장 조성이나 일대일로 추진 등 세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중의 패권전쟁은 표면적으로 대만해협의 긴장 관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시적으로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으나 앞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대만해협이나 한반도가 미·중의 충돌 대리전의 가능성을 일부에서 제기하기도 한다. 70여 년 동안 남북긴장이 유지되어 온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더 두려운 이유다.

6·15공동선언과 평화로 가는 길

6·15 남북공동선언이 남북 정상이 만나 갈등과 분단을 넘어 협력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진정한 출발점이 된 지 22년이 흘렀다. 이후 남북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남북평화협정은 요원하고, 종전선언조차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논란 중이다. 민족의 생존 앞에서 상호이해와 존중, 그리고 경제협력은 불가능한 것일까. 오히려 미·일·중·소의 열강의 각축장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넘어 민주적이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의 길로 향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참극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통일 독일의 교훈을 되새겨 남북이 평화적 공존의 길을 적극적으로 찾음으로써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새롭게 출범한 정부의 시급한 과제이며, 남북의 ‘6·15남북공동선언’ 22돌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본자세여야 할 것이다.

임선호 인권기자

 이 신문은 환경보호를 위해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군대, 인권을 논하다

세대별 군대 문화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인구의 절반이 군인 출신인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최근 인권 신장 움직임에 맞춰 평등, 자유에 대한 군 인권 문제가 이슈됐지만, 여전히 군대에 대해 ‘참으면 윤 일병이고, 터지면 임 병장’이란 말은 군대의 인권 수준을 말해준다.

과거에 비해 군대 내 처우와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변화해야 할 과제가 많다. 2020년 7월 사회 단절을 최소화하고 자율적 병영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군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허용됐다. 병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실 급식, 장병들에 대한 간부들의 위법한 지시, 가혹 행위 등을 고발하는 이른바 ‘군투’(군대 내 미투)가 연일 이어졌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군인들에 대해, 국방부는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아쉽다.

군대 부실 급식 논란과 코로나속 인권

2021년 군 장병 한 끼 급식비는 2,930원에 불과했다. 이는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 80% 수준이다. 해마다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커피전문점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치는 예산이다. 군 ‘부실 급식’ 논란은 지난 4월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 다시 불거졌다. 격리 중이라고 밝힌 한 장병이 각두기 3조각, 손톱만한 생선, 밥 조금, 닭 한 조각이 담긴 식판 사진을 공개하며 코로나19 격리 장병 부실 급식 문제를 알렸다. 보기도 한참 못 미치는 식단을 보며 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실 이는 격리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 부대에도 구체적인 사례가 공개돼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인권 침해

지난해 4월, 육군 훈련소 ‘과잉 방역’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훈련병들은 입소와 동시에 PCR 검사를 받고, 1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총 3일 동안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면과 양치가 금지됐다. 심지어 수면시간에도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육군훈련소는 방역 조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훈련병의 상황을 고려하면 무의미한 방역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훈련병들의 생리현상과 위생의 자유를 통제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폭력에 방치된 병사의 인권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 동안 접수된 군 인권침해 관련 진정 사건 중 폭력·가혹 행위가 가장 많았고, 생명권 침해, 언어폭력이 뒤를 잇는다고 발표했다. 2014년에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건’은 우리에게 익숙한 군 내 폭력·가혹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국방부는 ‘인권 업무 훈령’을 대책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군대 내 가혹 행위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세대별 군필자가 경험한 군대 인권

대전시인권센터 인권알림이단은 지난 8일, 10일 이틀에



▲ 지난 8일, 10일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세대별 군대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군필자 5명을 인터뷰 했다.

걸쳐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 대한민국 군필자가 경험한 군대 인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군대 인권 상황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20대 육동환, 오지섭 씨를 만났다. 그들은 동갑 친구로 2021년 5월, 9월 각 18개월의 군 복무 후 제대했다. PX병(복지지원병)으로 근무한 육동환 씨는 “18개월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의식주 부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다행히 폭언과 폭행 등 인권 침해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만약 발생하더라도 비밀보장이 가능한 ‘소리함’을 통해 부조리함을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 가족과 또는 친구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점은 그동안 군 인권 문제에 대한 많은 변화점이라 보인다.

오지섭 씨는 군인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과 대우는 좋지 않다고 했다. 그는 “휴식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제한된 상황에서의 힘든 일과를 소화해내는 만큼 군인들에게 최저시급, 부대 편의 시설 개선 등으로 존중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30대 권인호 씨는 2012년 12월, 21개월에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다. 운전병으로 근무한 그는 디지털 군복으로 바뀐 세대이기도 하다. 2011년 침대가 생활관에 도입되어 침대 생활을 했고 생활관도 동기들과 함께 사용했다. 과거에 비해 생활관 환경과 시설은 나아졌지만, 그가 경험한 군대 내 인권침해 사례는 많았다. 먼저 과도한 폭언과 폭력, 몸의 동작과 두발 제한은 물론 군대에서 검열하는 책과 음악, 주입식 사상교육 등을 인권침해 사례로 꼽았다. 그는 다양한 군 문제 중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군대가 공공성을 가진 집단으로 시민의 합의와 공통의 이해가 기초한 대의의 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대가 공공성을 지닌다는 것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복무에 대한 존경을 보상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인정하고 처우와 교육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단계적으로는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전문성과 복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40대 이경호 씨는 2000년 3월, 24개월의 군 복무를 마쳤다. 파주에서 포병으로 근무했던 그는 군 복무 당시 심각했던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지적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하는 폭력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자신 또한 선임병이 되어 같은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폭력이 당시 군 문화로 여겨고 폭력은 반복적으로 학습된다”고 말했다. 군대 내 폭력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개인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지 못한 복무 행태와 과도한 징집은 군대 시스템과 보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 발생시킨다”고 했는데 군대에서 어수룩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인 ‘고문관’은 폭력의 대상이 되며 군대 내 부



▲ 권인호 씨가 2011년 군복무 당시 사격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제공=권인호

조리함을 고발해도 비밀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폭력을 근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0대로 전방 전차대대에서 근무한 이선우 씨는 제대하지 30년이 지났지만 군 생활 중 목격한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끔찍하다고 말한다. 당시 군 생활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다.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이었다. 의식주는 물론 폭행과 폭언이 일상이었고 복무 중 목격한 성폭력까지 쉬쉬하고 넘겨야 했다. 심지어 징계 받은 해당 병사가 또다시 같은 가혹행위를 반복해도 큰 제지가 없을 정도였다. 군대 내 모든 문제가 ‘군대’라는 포장지에 모두 감싸졌던 시대를 회상하며 “그때는 군대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포기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분명 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아들은 현재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이다. 종종 불편함은 없는지 건강한지, 전화통화를 하는 그는 “아들과 내가 경험한 군대는 많은 부분 다르지만 여전히 다양한 복무 형태 보장과 처우 개선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간 존엄이 존중되는 군대 문화 조성되길

대한민국 청년들은 한창 헬기 왕성한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아직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인권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군 문화 변화에 귀추를 주목해 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 원인을 찾기보다 사태를 모면하려고만 하는 방식이 계속되는 안 될 것이다.

군은 그동안 제시되었던 다양한 문제를 계기로, 군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병영문화를 개선할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군인으로서 훈련은 철저해야 하지만, 훈련이 끝나면 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군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도록 존중하여 군대 인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군대 인권 문제 실태를 풀어낼 진정한 열쇠일지 모른다.

농아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요

대전시립손소리복지관 강경주팀장을 만나다

매년 6월 3일은 농아인의 날이다. 농아인은 수어를 모어로 쓰는 '농인'과 음성언어로 소통하는 '난청인' 모두를 말한다. 올해로 제26회를 맞이한 농아인의 날은 1996년 제정해 오늘날까지 농아인 인권 향상을 위해 기념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매년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이하 손소리복지관) 중심으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농아인과 수어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동구 원동에 위치한 손소리복지관은 '눈으로 소통하는 세상'의 미션과 함께 농아인 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에서 농아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농아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5년부터 본격 운영된 복지관은 현재 관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6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중 네 명이 청각장애인이다.

손소리복지관에서 농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서비스 마련을 위해 힘쓰는 강경주 팀장을 만났다. 가족 평생교육팀을 총괄하고 있는 그녀는 2016년에 입사하여 7년 차 사회복지사다. 청각장애라는 특징을 가진 그녀는 손소리복지관 입사 전에는 구화(입으로 보고 대화하는 것)를 사용했으나 복지관 입사 후 더 다양한 이용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제는 수어도 원활하게 사용한다.

손소리복지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가족평생교육팀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 건강증진사업, 평생교육 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아동에서 성인까지,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 및 진행합니다. 그 외 맞춤형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팀원들과 함께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항상 청각장애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강화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강경주 팀장



최근 팀장님의 관심 이슈는 무엇인가요?

최근 가장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는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드라마 속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출연하는데 그분을 '난파'에서 봤거든요. 난파는 손으로 노래하는 뮤지컬 극단인데 대부분 비장애인을 위한 무대가 주를 이루는 공연장에서 청각장애인이 당사자가 수어로 공연을 해요, 음성 지원도 하고 있어 비장애인도 함께 관람이 가능합니다. 드라마에서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하며 연기를 하니깐 매우 반가웠어요. 비장애인만 연기할 수 있는 편견을 버리고 장애가 있는 이들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수어는 한국어와 함께 대한민국의 공용어예요. 손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언어 수어를 많은 사람이 관심두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비장애인이 참여 할 수 있는 봉사활동 행사가 있나요?

손소리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연중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면 행사가 아닌 온라인(ZOOM)이나 인원 제한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5월 2일부터 사회적 거리와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복지관에서는 6월 3일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6월 9일 복지관에서 진행 예정이며, 이날 오전에는 '농아인의 날'을 알리는 가두행진과 수어 노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비장애인인 대전지역의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수어 노래를 부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기관에서는 이번 행사 외에도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많은 곳이니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저희 기관에는 만나는 대상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청각장애인이 다양하다고? 왜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 수단이 매우

다양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수어만 사용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뿐 아니라 구화(입 모양을 보고 대화하는 자), 와우 보청기를 착용한 자, 보청기를 착용한 자, 필담(글을 주고받는 것) 또는 마음(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사용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양측 보청기를 착용하는 구화인 이고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대화합니다. '입 모양을 보면서 100% 소통이 가능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람마다 말하는 입 모양이 다르므로 제가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경주 팀장과 대화는 즐거웠고 농아인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게 됐다. 수어통역사라도 함께 자리해 질문과 답변을 수어로 진행했는데 손으로 전하는 언어가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강경주 팀장은 수어를 통해 "혹여 여러분들이 청각장애인들을 만나게 될 경우, 먼저 특성을 파악하여 대화하신다면 우리 청각장애인들은 작은 관심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원자,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이 행복하고 웃음이 넘쳐나는 곳, 꿈을 실현하고 자주 오고 싶은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온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간단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어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다. 대전인권신문 독자도 아름다운 수어를 관심 두고 배워보길 바란다.

글·사진 김태현 인권기자

손소리복지관은 농아인(청각, 언어장애인) 전문기관으로서 농아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여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복지관 상담문의

대표전화 ☎ 042)345-9900
이메일 djsonsori@hanmail.net
홈페이지 <https://djsonsori.or.kr/>

인권에 관심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일상생활 중 경험한 인권이야기, 독자투고에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인권도서 서평 등 인권 관련된 글이라면 가능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대전!**

보내주실 곳 djhr1210@naver.com 분량 1,000자 이내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Daejeon Human Rights Center


인권카드뉴스 **안전하게 주차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안전하게 주차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대면광역시 인권센터

편리하며,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라는
장점을 가진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여
안전 수칙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면광역시 인권센터

하지만, 단속을 시작하지 3개월 만에
법규 위반 건수가 3만 건이 넘는 정도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중, 주차 권장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게 되면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Oops!



대면광역시 인권센터



*사진 출처: 에이블뉴스, 김광식씨 제공

이처럼, 시각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설치한 점자 블록 위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면광역시 인권센터

*인도 위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걸려서 크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아파트나 상가 근처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 킥보드가 많아
집을 나갈 때나 상점을 이용할 때 특히 위험합니다.*
-대전일보 인터뷰 중 시각장애인 김 모씨-

*점자블록 위 주차된 전동킥보드와
부딪힌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 의지하고 따라가는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대전일보 인터뷰 중 시각장애인 박 모씨-

*옆에서 전동킥보드라고 말해줘야 알지
아니면 몰라요. 점자블록 위에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다산콜센터나
경찰에 신고하면 처리해주는데
전동킥보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겨레 인터뷰 중 시각장애인 최 모씨-

대면광역시 인권센터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은 어디일까?

인도 위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

그럼 어디에 주차하는 것이
안전할까?




대면광역시 인권센터

전동킥보드 주차 권장 구역

벤치,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등 주요 구조물 옆

자전거 거치대 혹은 지역별
자전거 대여소 근처
(대전은 타슈 대여소 근처)



대면광역시 인권센터

개정된 도로교통법1



행동기 면허 소지
및 어린이 동반 금지


헬멧 착용

음주 운전 금지

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
및 1면만 탑승

대면광역시 인권센터

개정된 도로교통법2



동행장시 착용

보행자 안전 우선

주차 권장 구역에 주차

대면광역시 인권센터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지키며
사고 없는 세상을 만들시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문 제3조-


세각
임세나



대면광역시 인권센터

**안전하게 주차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편리한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사용률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만큼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권장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는 누군가
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QR코드

임세나 인권알림이단

동화속 인권 **작은 왜 거인의 물건을 훔쳤을까?**

**소년법과 촉법소년
무엇을 중시해야 하는가**

가난한 집의 게으름뱅이 소년 잭은 어느 날 소
를 팔아 마법의 콩을 얻게 된다. 마법의 콩이 하
늘까지 자랐고 잭은 콩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그
위에는 거인의 집이 있었고 잭은 보물들을 집에
가져온다. 다시 거인의 집에 올라간 잭은 보물을
훔치다 거인에게 들킨다. 잭은 도망쳐 콩나무를
베고 따라 내려오던 거인은 떨어져 죽게 된다.
그 후 잭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

동화책 '잭과 콩나무'는 동화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권
선징악'의 교훈과 거리가 있다. 만약 동화속 주인공 잭
이 현실에서 존재한다면 어떨까? 오늘날 우리의 시각
으로 잭을 바라보자.

소년 잭은 대한민국 소년법에 적용받는다. 이 법은 소
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조치를 통해 건전
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
법은 '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
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범죄소년은

형사 책임 연령에 속해 소년법의 절차가 아닌 형사 절
차를 밟을 수도 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소년법의
최대 처분은 소년원 2년 송치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범죄율을 보면 10대의 범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년법의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2009년 11만이었던 소년법은 2017년
에는 7만, 2020년에는 6만 4천으로 줄었다. 또한 2021 교
정통계연보에 나온 소년수형자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
면 강간, 강도 살인 등은 2011년 53.5%, 2020년 30.5%로
줄었다. 절도도 22.8%에서 18.3%로 감소했다. 사기 횡
령과 폭행 상해는 2011년 4.4%, 2020년 18.3%로 늘었다.
이전과는 다르게 중범죄의 비율도 줄어들고 유형도 바
뀌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차갑다. 소년법의 감소세와는 다르게 촉법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6년 6천 7백여 명에서 2020년 9천
6백여 명으로 증가했다. 그 중 만 13세가 대다수를 차지
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
화, 절도 등 강력범죄로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
5천 여 명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에 좋지
않은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는 같은 연령대가 아닌 누구에게나 날을 세운다. 잭이
큰 거인에게 피해를 주었듯 어린이와 성인을 가리지 않
는다. 범인을 잡았을 때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
한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심지어 피의자가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들을 용
서해야 하는 걸까. 이런 시각으로 촉법소년의 연령 제
한을 바꾸자는 의견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만 14세 기준은 1953년 이후로 한 번도 바
뀐 적이 없다.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청소년들의 발달 수준도 다른 점은 확실하다. 하지만
연령 기준을 바꾸는 방법으로 소년 범죄가 확연하게 줄
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낙인이론으
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교육적인 부분은 당연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프로세스를 바꿔야 한다
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관 수를 늘
린 후 보호관찰관 1명당 관리 대상자 수가 줄어들며 따
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법 재범률이 3년 만에 하
락했다. 처벌의 강화만으로 대하기엔 교화를 할 수 있
을 다수의 소년들까지 놓칠 수 있다.

잭은 왜 거인의 집의 물건을 훔쳤을까? 형편이 어려운
집의 잭이 제대로 된 도움과 교육을 받았다면, 한 번 물
건을 훔쳤을 때 제대로 된 교정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이다. 어느 쪽이 옳다 할 수 없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유선 인권기자

대전인권신문, 일상에서 인권을 찾다

대전인권신문 50호! 축하합니다

2022년 6월, 전국 최초 시민의 인권적 관점으로 지역 소식을 전하는 대전인권신문이 제50호를 발행한다. 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소비되고 상업적 광고와 양극화된 성향의 뉴스가 넘쳐나는 오늘날, 인권의 가치가 우선 되는 대전인권신문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창간호부터 인권 기자로 활동했다. 벌써 5년째 이어지는 활동을 되돌아보며 삶의 가치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한 걸 느낀다. 추운 겨울밤 거리에서 쪽잠을 자야만 하는 노숙인에 대해 취재하고, 성인문해학교에서 어르신을 만나 교육권과 알 권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심각한 지역 환경실태를 알리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을 찾았던 경험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와 존엄을 다시 마음에 새기기 충분했다.

인권기자단 활동은 늘 즐겁고 재미있었던 건 아니다. 인권이라는 생소한 주제는 기사 작성부터, 소재를 찾기도 힘들었다. 특히 종이신문으로 발행되는 대전인권신문은 온라인 신문처럼 수정 불가하다. 한번 인쇄되면 영원히 남는다는 부담감에 기사 오타와 문맥 오류가 있을 때는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첫 기사 작성 후, 지인들의 격려와 응원은 큰 힘이 됐다.

창간호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당시 담당자 또한 스스로 공부하며 기자단을 운영했고, 그 어디에도 없었던 인권신문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논의했다. 그렇게 발행된 창간호는 지금까지 인권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버팀목이 된다.



▲ 2018년 5월에 발간된 창간호(왼쪽), 대전광역시 인권기자단.

대전인권신문 발행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지원 속에 이루어진다. 그 중 지역 언론인으로 구성된 5명의 편집위원은 더욱 질 높은 신문 발행을 위해 매의 눈으로 인권 기자들이 취재한 글을 검토한다. 그래서 인권기자단에 편집위원회 회의는 두려움이 된다. 하지만 매월 전문 언론인들의 피드백 덕분에 대전인권신문은 해를 거듭할수록 내용과 방향이 풍성해지고 있어 그 피드백이 기다려지기도 한다.

인권기자단 자체평가도 매월 진행한다. 인권기자단 정기회의를 통해 전월 신문 평가와 다음 달 신문 지면 방향과 구성안을 논의한다. 사실 평가 할 때가 가장 힘들다. 아쉬움과 부족한 점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인권신문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소식과 관점. 그리고 종종 독자들의 긍정적 평가는 어느덧 인권기자단으로 자긍심과 자부심이 된다.

대전인권신문은 자칫 어렵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인권'이란 주제를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소재를 찾는다.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폭넓은 연령대 독자가 독자투고에 참여하고 있어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신문이란 걸 알 수 있다. 지하철역과 도서관에서 신문을 접하고 애독자가 되었다고 밝히기도 하고, 동물권과 환경권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는 독자들의 반응은 또 다른 동력이 되기도 한다.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인권'이란 주제로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나와 이웃의 삶과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어 좋았다. 대전인권신문은 대전의 자랑이다. 훗날 대전인권신문은 대전의 인권 역사 기록물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열심히 취재할 것이다. 인권의 가치가 담겨 있는 대전인권신문이 대전을 넘어 전국에서 사랑받는 신문이 되길 바란다.

글·사진 김태현 인권기자

대전광역시 인권기자단 5기 위촉



▲ 6월 18일 제5기 인권기자단이 발대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로 인권을 말하다

대전시인권센터는 지난 18일 제5기 인권기자단을 위촉했다.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인권적 관점으로 취재·보도하는 인권기자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서류 심사와 사전 교육을 거쳐 선발된다.

신규 위촉한 5명의 신입 인권기자를 포함한 총 19명의 인권기자단은 20대부터 60대까지 학생,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인권기자단은 2023년 6월 17일까지 1년간 대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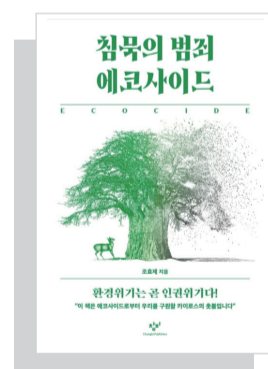
인권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대전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신규 기자단으로 위촉한 베트남 유학생 완 티 느 꾸인(26) 씨는 “인종, 성별, 국적, 민족, 언어, 종교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살고 보호받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기사를 통해 독자에게 인본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다양한 인권 소식을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기자단 활동 내용은 대전인권신문 및 대전시인권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글·사진 김태현 인권기자

인권도서 소개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저 자 | 조효제
출판사 | 창비

세계가 들끓고 있다. 한쪽에 기후-생태 위기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불평등-인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팎으로 맞물린 환경위기와 인권위기의 연계성을 탐색하고 이 악순환을 끊어낼 사회-생태 전환의 길을 제시하는 인권학자 조효제의 신간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가 출간되었다. 우리는 인권과 환경을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로 다루는 칸막이식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하지만 인류의 풍족한 삶을 위한 지구행성의 총체적 파괴(에코사이드)는 자연의 역습으로 인한 인간 말살(제노사이드)을 낳고 있다. 저자는 이제 환경과 인권의 심층적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구행성의 정의'라는 큰 틀에서 인권·사회정의, 기후·환경·생태 정의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버 책소개 중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전환, 이제는 ‘선배시민’

늙은 사람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노인’을 높여 이르는 말로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나 호칭을 높여 부른다 해도 노인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국은 2030년 고령인구 비중이 25.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인 12.9%의 3배를 넘어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 ‘노인’은 나이가 많고, 아프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난으로 늙어서도 일해야 하며, 고집스럽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미지가 강하다.

우리가 바라보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결국 언젠가 노인이 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노인이 되어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는 등 은퇴 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예전처럼 평균수명이 짧아 은퇴 후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쉽’으로 보낸다거나 혹은 어떤 사회참여 없이 뒤로 물러나 누군가의 돌봄만 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머물 수는 없다.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하다. ‘노년기’에 당당하게 시기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해내며 시민으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시민이자 선배인 존재, ‘선배시민’을 아시나요?

‘선배시민’이라는 노인을 새롭게 부르는 명칭이 있다. ‘선배’와 ‘시민’이 합쳐진 것으로 새로운 노인상을 제시한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선배’는 같은 분야에서, 지위나 나이·학예 따위가 자기보다 많거나 앞선 사람을 뜻하며, ‘시민’은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 : 네이버 어학사전) 선배시민은 물러나야 하는 노인이 아닌, 공동체 내 ‘시민’일원이면서 삶의 경험에서 ‘선배’인 것이다.

선배시민은 ‘시민권이 당연한 권리임을 자각하고, 이를 누리며, 공동체에 참여하여 자신은 물론 후배시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노인’으로 규정된다. (출처 : 유범상, 유해숙 저 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

노인을 부정적인 이미지에 가두고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후배시민을 위해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노인’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전국 노인복지관과 노인들이 선배시민에 대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선배시민 자원봉사단(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잡고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이자 선배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인식과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시민의 한 사람인 ‘선배시민’으로 당당하게 노년기를 살아가는 노인상이 보편화 되지 않을까.

임은정 인권기자

실버존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노인보호구역의 현실과 미래

2020년, 대전지역의 한 해 교통사망사고자는 62명으로 이중 보행자가 37명으로 60%에 이르러 전국 평균 35.4%보다 월등히 높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17명으로 대전지역 전체 보행사망자의 절반에 가깝다. 실버존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노인보호구역이란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노원, 경노당, 노인복지시설과 더불어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생활체육시설 등의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의해 노인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인복지관이 있는 도로를 살펴보니 일부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넘긴 채 주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인보호구역 노면표지 바로 앞에



▲ 나뭇잎으로 가려진 노인보호구역 안전표지가 노인보호구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 노인보호구역 노면표지 앞에 쓰여진 시속 50킬로미터를 나타내는 속도표지가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50으로 숫자가 커다랗게 표시되어 있었다. 노면표지와 안전표지판 이외에 별다른 교통안전시설도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표지판 일부는 인도로 향하고 있으며, 나뭇잎에 가려진 안전 표지판이 적지 않아 노인보호구역 지정 취지를 무색케 했다. 그리고, 어느 노인정 주변의 노인보호구역 노면표지는 흐릿하게 지워져 네비게이션의 소리를 듣고 나서야 이곳이 노인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홍보 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여러 면에서 비교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비롯하여 시설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와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및 과속방지시설, 차량의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22년 4월 20일부터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여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도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모든 노인복지시설로 확대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법령 개정을 계기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와 교통안전시설보강 및 홍보, 교통단속을 통하여 지금까지 소홀하게 관리되어왔던 노인보호구역의 확대강화로 노인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고, 운전자는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인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특별한 주의와 서행 운전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글·사진 임선호 인권기자

내 생애 첫 지방선거를 마치며

참정권은 소중한 나의 권리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D-5 5월 27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김보민(20) 씨가 사전투표를 위해 집을 나섰다. 충북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녀는 21학번 새내기 대학생이다. MZ세대답게 학과 공부, 동아리, 아르바이트, 취미생활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바쁜 그녀지만 투표 행사는 그 어떤 스케줄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에 따라 내 손으로 투표하고 당선자가 결정되어 흥미롭다”고 말한 그녀는 평소 가족과 함께 각 정당과 후보, 공약을 살펴왔고 드디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치고 잠시 그녀와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투표한 소감은 어떤지?

떨려요. 우선, 제가 선택한 후보가 당선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표 대기 줄이 길면 어찌나 고민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투표를 위해 충북에서 대전까지 왔어요. 충북에서도 사전투표가 가능하지만, 가족과 함께 즐기는 작은 축제라고 생각해서 대전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했다고 생각하니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졌어요.

이번 선거 참여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면?

사실 선거에 나온 후보 중 모르는 후보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배송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안내문을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리고 관심 있는 공약과 후보

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전 비교적 쉽게 후보들의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청각·시각·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제작 비율이 낮다고 들었어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다양한 선거공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세 청소년 선거권에 관한 생각은?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는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생애 첫 참정권을 행사한 데 이어 두 번째 투표합니다. 선거권 연령은 가능한 한 많이 하향하는 게 헌법의 정신이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10대 초반에서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피아제의 말처럼 만 16세까지 투표 연령을 낮추어 젊은 세대도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기간 중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공략은 빠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쩔 수 없는 경쟁 구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고 후보 공약 및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현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 후보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지만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리고 당선자는 무엇보다 인권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된다면?

저는 6.1 지방선거가 두 번째 선거 참여입니다. 첫 투표 행사시 간호법 제정에 힘을 써 줄 후보에게 투표했어요. 아쉽게 제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저와 다른 의견일지라도 많은 시민이 선택한 결과를 존중합니다. 시민을 위해 좋은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 후보자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자의 공약 이행률을 향후 꼭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졌다. 투표율은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역대급 비호감 선거, 네거티브 선거로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앞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분열을 통합하고 모두를 위한 훌륭한 정책을 펼칠 바란다.

이선우 인권기자



▲ 사전투표를 마친 김보민씨가 환하게 웃고있다.

인권 칼럼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별다른 지 않고 평범하다는 것을 뜻할 때 우리는 '보통'이라는 단어를 쓴다. 반대로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거나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넘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보통이란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쳐지지도 않는 중간 정도를 말하는데 이 보통의 기준은 사람이나 소득, 나라, 종교, 직업군에 따라 그 범위와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통계학적이 아닌 직관적인 측면에서 중산층을 보통 사람으로 규정해본다면 우리나라는 12년 학제를 거쳐 대학교를 졸업하고 주5일제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위소득 50~150%(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4인 가구 기준으로 480~500만원)에 속해있는 사람들을 중산층(보통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산층의 범위도 사람마다 보는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처한 환경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나는 보통 사람의 기준을 중산층의 범주에 들기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사람으로 간주해 보고 싶다. 아니 어쩌면 중산층에도 들지 못하고 평생 일해도



집 장만도 할 수 없으나 중산층을 꿈꾸는 나 같은 사람을 보통 사람들의 범주에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른다.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보통이 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은 선량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원래부터 부끄러움도, 염치도 없었던 것처럼 보통의 사람들에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다가와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과 공수표를 던진다. 하지만 그들은 목적을 이루고 나면 스스로 선량한 이웃의 가면을 벗고, 마치 처음부터 높았던 사람처럼 거들먹거리며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취하며 보통 사람들을 멀리한다.

서민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며 좀 더 나은 삶을 만들어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모습들은 어디 가고 좀 더 힘 있고,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밤낮없이 일한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거기까지!”라고 말하고 싶다. 보통의 사람들은 군림하고, 거들먹거리며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 처음처럼 겸손하고 선량한 이웃의 모습으로 보통의 사람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꿈꿀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싶어질 뿐이다.

사실 선거철에 내걸었던 공약을 다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정치인들이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서로가 속한 정당이 달라도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업하는 모습을 보통 사람들은 보고 싶어진다. ‘딱 여기까지’가 아닌 보통 사람들 곁에 ‘계속 정치인으로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선량한 이웃과 같은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싶다. ‘겸손, 섬김, 공감, 소통, 평등, 최선’의 단어가 정치인의 단어가 되기를 꿈꾸어 본다.

유복례 인권기자



2022 대전광역시 인권공모전

6.13.-8.5. / 60일간

접수기간

2022. 6. 13.(월) - 8. 5.(금) / 60일간

공모분야 포스터 / 에세이

공모주제

모두 함께 배려하고 누리는 인권도시 대전

- 대전이 앞으로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점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표현한 작품
- 폭력과 차별, 혐오가 사라진 희망찬 대전을 묘사한 작품
-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작품

응모자격

전국 단위/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개인 및 단체(3인 이내)

* 단체의 경우 시상금은 개인과 동일하며, 단체명으로 상장 수여

접수방법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홈페이지 www.djhr.or.kr

결과발표 2022. 9. 30.(금) 예정

시상내용 대전광역시장상 등 25점 수여

(단위 : 천 원)

부 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부문별 상 금
		각 1점	각 2점	각 2점	
인 권 포스터	초등부-저(5점)	500	300x2	200x2	1,500
	초등부-고(5점)	500	300x2	200x2	1,500
	청소년부(5점)	500	300x2	200x2	1,500
인 권 에세이	청소년부(5점)	500	300x2	200x2	1,500
	일반부(5점)	600	400x2	300x2	2,000
합 계		2,600(5점)	3,200(10점)	2,200(10점)	8,000

* 접수 작품 수 및 작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